

취약계층·1인 자영업자 생활자금 융자… “이자 부담 낮춘다”

근로복지공단-IBK기업은행

이차보전 협약 맺고 다음 달 시행
중위소득 이하, 최대 1000만원 융자
공단 금리 일부지원 4만명 수혜 예상

근로복지공단과 IBK기업은행이 저소득 근로자, 노무제공자, 1인 자영업자의 생활 필수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을 맺고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IBK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자를 일부 지원한다.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노무제공자·1인 자영업자가 결혼이나 자녀 양육으로 생활 필수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근로자의 신용대출 금리가 5.8%로 결정된 경우, 공단에서 3%를 지원하고 근로자는 2.8%에



지난 4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 3번째)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왼쪽 4번째)이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근로자 금융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

당하는 이지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사업 규모는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기업은행에서 도합 1000억 원의 융자를, 공단이 30억 원의 이자를 지원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공단은 그간 취약계층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의

생활 필수자금을 담보 없이 연이율 1.5%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공단의 한정된 예산만으로는 늘어나는 융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은행자금을 재원으로 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새로 도입하게

됐다.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등이 생활 필수자금이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차보전 융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차보전 융자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

인 근로자·노무제공자·1인 자영업자이다.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또는 7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근로자는 이차보전 융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복신청 가능 여부는 개인별 대출 한도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가능하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공공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증명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더욱 많은 취약 근로자 등이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차보전 융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농업수입안정보험 첫발… ‘봄감자’부터 전국 확대

농식품부, 농가 소득 불안정성 완화
자연재해·가격하락 등 모두 보장
21일 고구마·옥수수 등 판매 개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입이 7일 봄감자 품목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 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 등에 의한 농가의 소득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범위인 자연재해·화재·병충해 등에 따른 피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한다.

농가의 품목별 수입(보험가입연도)이 ‘기준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농산물 시장가격이 하락했을 때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장해주기 위해 도입된 ‘농업수입안정보험’이 개시한다. /뉴시스

지급한다. 기준수입은 농가별 과거 5년 평균 수확량에 과거 5년 평균 시장가격을 곱해서 산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해까지 10년간 시범사업으

로 운영되었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본 사업 전환을 결정했다. 농가 소득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상품 유형을 다양화한 것이다.

올해는 총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

영할 예정이다. 고구마와 옥수수 등 9개 품목은 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고 벼 및 봄감자 등 6개 품목 8개 상품은 일부 주산지에서만 시범 운영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의 농작물 재해보험과 보장범위가 중복되기 때문에 농업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원섭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 국민 식생활에 중요도가 높은 30개 품목으로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해, 더 많은 농업인이 재해와 가격변동에 따른 수입 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4월부터 판매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송실대가 이윤재 총장과 전체 단과대학 교수진 간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뉴시스

이윤재 송실대 총장 “소통서 혁신 시작”

전체 교수진과 간담회

송실대학교는 지난 달 18일부터 4월 3일까지 3주간 이윤재 총장과 전체 단과대학 교수진 간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윤재 총장의 취임 이후 처음 열린 대규모 소통 행사로, 송실대의 교육 혁신과 학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2월 취임식에서 ‘초혁신(Hyper-innovation)’을 통한 송실 ‘Rebooting’을 강조한 이윤재 총장은,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이번 간담회는 IT대학, 공과대학, 경제통상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인문대학 등 8개 전체 단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학문 분야의 특성과 현안을 고려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 교수진은 교육과정 개선, 연구 지원 확대, 학생 복지 강화 등 다양한 현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이윤재 총장은 “대학의 혁신은 교수진과의 신뢰에서 시작된다”며 “각 분야 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송실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또한, “송실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수진의 연구 역량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연구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이현진 기자 ihj@

‘과수화상병’ 신속·정확한 공적방제 강화 산업부, 지역난방 요금 최대 5% 낮춘다

농진청, 진단법 표준화·전문교육 실시

농촌진흥청이 ‘과수화상병 진단을 맡는 정밀 검사기관’을 추가로 지정함에 따라 정밀진단 지침서를 발간·배포한다. 또 검사 인력 전문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진단법 표준화 작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 곳에서만 과수화상병 정밀진단이 허용돼 왔다.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채취한 화상병 의심 시료를 국립농업과학원으로 직접 운반해 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거리가 먼 지역은 검사가 늦어져 방제 대응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밀 검

사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식물방역법을 개정(작년 7월 시행)해, 올해부터 정밀 검사기관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정밀 검사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인력, 검사능력을 갖춰야 하며,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지정한다. 농진청은 식물방역법에 근거해 이달 2일 최종 7개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내 농업기술원을 과수화상병 정밀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신규 지정된 전국 7개 지역의 정밀 검사기관이 일관된 기준으로 신속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진단법을 정리한 진단 지침서를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오는 7~21일 기간에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난방 사업자의 열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선 지역난방 사업 초기에 적자가 발생해 ‘미회수 총괄원가’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와 동일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열 요금은 지역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사업자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 요금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측면을 고려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 기존에는 요금 상한 구간이 한난 요금의 100%, 110% 구간에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난 요금의 98% 상한 구간을 신설한다. 올해 98%를 시작으로 2026년 97%, 2027년 9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